

국민경제자문위원 서면의견

1. 거시경제 분야

□ 재정정책

- 우리 경제는 고령화와 저 출산의 인구구조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성장정체기 선진국의 재정정책의 경험을 참고하여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지나친 정부재정투자를 동원하는 대신,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미시적 정책 (감세·규제완화, 민영화, 인적자본 및 연구개발투자 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함
- * (미국) 90년대에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생각에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하고 민간투자를 증대시킴
- (영국) 90년대 후반부터 민자유치 노력 및 golden rule(정부의 경상지출을 위한 차입을 금지)을 도입

□ 환율정책

-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환율운용 요망

□ 금융 분야

-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으로 작은 충격에도 시중자금이 급격히 이동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음
 - * 총수신 중 단기수신 비중 : '98년 말 31.4% → '04년 말 48.3%
-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고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 부실 중소기업 조기 처리 인프라구축 (중소기업 전용사모펀드나 중소기업 구조조정펀드를 조성) ▲ 주식시장 육성·발전 (PEF 활성화,

[2005.5.7, 토, 국민경제자문위원 의견, 경제보좌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 ▲ 중장기채 시장 육성 등 다양한 기반 구축 필요

- 우리의 산업구조는 자본집약도·사업위험이 높은 미래산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금융산업은 여전히 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져 금융과 산업구조간에 부조화현상¹⁾을 보임
 -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리고 금융산업 자체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하여 은행과 자본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금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 금융산업발전 마스터플랜 작성·추진, 금융규제개혁위원회 설립, 금융전문대학원 신설

□ 소비 추세

- 국내거주자의 해외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고급화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국내 산업 (교육·관광 등)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 특히 서비스산업은 국가간 거래비용이 높아 다소간의 경쟁력 격차에 의해 수요가 민감하게 이동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여행·교육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은,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크게 낙후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

2. 산업 및 통상 분야

□ 산업분야

- 경쟁 심화와 비용절감 압력 가중, 개방화·세계화 가속화, 부품·기술 표준화에 따른 글로벌 소싱의 확산에 대응하여, 외국기업의 글로벌 소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국내 중소

1) 증권연구원에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R&D강도가 높거나, 자본집약도가 높거나, 사업위험이 높은 산업은 자본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고성장을 하며, R&D강도가 낮거나, 자본집약도가 낮거나, 사업위험이 낮은 산업은 은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고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5.5.7, 토, 국민경제자문위원 의견, 경제보좌관]

기업간 협업체계(ICMS)²⁾ 구축, 첨단 부품의 글로벌 공급
기지화 전략이 필요

- 에너지 절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대체에너지를 적극 활용

□ 기업분야

-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정관 변경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제도 (증권거래법)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어긋나는 등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삭제될 필요
- 3만m²이상 공장 신·증설시 2중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로 인해 기업에게 부담을 주므로 공장밀집지역과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2중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 폐지

* 도시화가 예상되는 도시지역 밖의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지역의 건축물 외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 무역·FTA

- 대외개방정책에 필요한 원활한 인적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므로 ① 외국인 정보 통합관리 ② 등급별 분류(관광, 비즈니스, 외국근로자)에 의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③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서류신청, 발급의 전산화 등을 제안

2) 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 Service : 개별 중소기업이 수주한 사업에 따라 마케팅, R&D, 디자인, 물류 등 부분적으로 기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속, 유연하게 발주 기업에게 납품하는 체제

[2005.5.7, 토, 국민경제자문위원 의견, 경제보좌관]

- 미국과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의 가격경쟁력 중심의 무역에서 기술, 문화, 국가이미지를 망라한 종합경쟁력을 육성하는 무역전략 필요
-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중소기업등 제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 제정추진중인 ‘무역조정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FTA 농어업지원기금과 같은 무역조정기금 조성이 필요)

3. 부동산 분야

-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택지공급상의 장애요인 해소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계획 등 기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부문 활용 (부동산투자회사 활용 등),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시 (2006년)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인하 등의 세제 개선

4. 노동 및 복지 분야

□ 노동 분야

- 매년 임금교섭에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금 인상률을 공식화하고, 최소 2년 이상 적용되도록 유도

※ 미국기업들은 생산성 향상분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임금인상률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3~4년에 걸쳐 적용

□ 복지 분야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근로소득보전제도(EITC)가 적용되지 않는 “불완전취업 및 미취업 근로저소득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숲가꾸기, 거리질서정리, 공해 방출감시 등) 및

[2005.5.7, 토, 국민경제자문위원 의견, 경제보좌관]

현금·현물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근로부조제도(가칭)”를 도입

가구소득 차상위층 (비수급 빈곤층 포함) 기초보장 수급 빈곤층	기초보장 수급확대 or 부분급여 확대	근로부조제도 도입 (Workfare)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기 초	현 자활사업 생 활 보 장	제 도
	근로무능력자 (장애인 노인 등)	근로능력미약자 (미취업, 불완전취업자)	근로능력자 (상용직 취업자)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 세대내·세대간 형평성, 사회보장기능면에서 매우 미비하므로 연금 보험료율이나 급여율 조정과 같은 모수적(parameter)·부분적 개선보다는 국민연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
- 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의 Three Pillar System을 골격으로 하고, 공적연금 미가입자에 대해 연금수급권 제공을 위하여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신설. 연금개혁은 금년중에 추진